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 은 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요 약]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업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업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자영업자, 취업빈곤, 저소득, 중고령 근로자, 저학력, 서비스산업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HRSDC, 2006). 물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빈곤율이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지만(OECD, 2009), 일을 하는 것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보장하는 것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다(HRSDC, 2006; OECD, 2009).

* 본 논문은 2012년 10월 12일 사회복지정책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최근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였는데(HRSDC, 2006), 1994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근로빈곤층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ECD, 2006). 네덜란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을 이루며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지만, 취업빈곤층(in-work poverty)도 함께 증가하였다(Snel et al., 2008). 이로 인해 과거에는 근로빈곤층이 미국 등 자유주의형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s)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으나, 이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 전체에서 관측된다(Lohmann, 2008; Snel et al., 2008).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상황이 악화되었으며(이현주 외, 2006; 이병희, 2007), 최근 근로빈곤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이병희, 2007).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율이 높다(OECD, 2006). 원인은 주로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빈곤정책의 핵심이 맞추어져 왔다(윤희숙, 2012).

반면, 자영업자는 부유계층이나 전문직으로 간주되었다(HRSDC, 2006; Schulze Bischoff and Schmidt, 2009). 그 결과 비정규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이병희, 2012),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배제되곤 했다(Hamilton, 2000). 더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소득하향신고를 통해 탈세하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시각까지 겹쳐져서, 자영업의 제반문제는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부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자영업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외환위기(1997년 말) 이전까지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2005년 영세자영업자 대책(5·31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김재호, 2009a; 이승렬, 2011).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비율이 높다(Lohmann, 2008; Snel et al., 2008; European Commission, 2010). 자영업자의 40%가 근로빈곤층이라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캐나다, HRSDC, 2006).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3~4배 높다(HRSDC, 2006; Eurofound, 2010). 더구나 자영업자의 높은 빈곤율 혹은 빈곤위험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취업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의 빈곤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HRSDC, 2006; Snel et al., 2008; OECD, 2009; European Commission, 2010).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저임금 근로 외에 자영업 종사가 근로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HRSDC, 2006; Biolcati-Rinaldi and Podestà, 2008; Lohmann, 2008; Snel et al., 2008; Crettaz and Bonoli, 2010; European Commission, 2010). 물론 여전히 저학력자, 근로시간 등도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지만(HRSDC, 2006; Biolcati-Rinaldi and Podestà, 2008; Snel et al., 2008)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근로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영업이 직업창출을 통해 실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며(European Commission, 2010; Taylor, 2011), 빈곤탈출의 대안이었던(성지미, 2011), 현재의 자영업은 임금근로의 대안도, 추가소득의 대안도 아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오히려 취업빈곤의 주요 메커니즘일 수 있다. 이에 외국도 자영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영세성)에 주목하며(이병희, 2012; Georgellis et al., 2005), 외국에서는 자영업이 근로빈곤 혹은 취업빈곤의 주된 결정요인임을 밝힌 연구들이 많다(HRSDC, 2006; Biolcati-Rinaldi and Podestà, 2008; Lohmann, 2008; Snel et al., 2008; Crettaz and Bonoli, 2010; European Commission, 2010).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도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으로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2010). 연일 발표되는 자영업자의 과다경쟁과 낮은 수익률, 자영업자의 몰락, 영세자영업의 증가, 그리고 높은 폐업률로 압축되는 자영업자의 위기는(연합뉴스, 2012. 8. 13; 세계일보, 2012. 8. 14; 문화일보, 2012. 8. 21) 이젠 상식이 되어버렸다. '하우스 푸어'가 등장한지 2년여 지난 올해 종종 보도되는 '자영업 푸어'라는 신조어(일자리와 실업, 2012. 8. 21; 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 9. 2) 역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빈곤층(윤희숙, 2012) 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영업에 대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받더라도 자영업 혹은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이 경제성장엔 기여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을 완화하고(이병희, 2012; Georgellis et al., 2005), 산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국내연구는 대부분 자영업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그 외는 자영업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나, 소액창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빈곤(영세성)을 연구한 논문도 있지만(이병희·강기우, 2008; 김복순, 2009; 최경수, 2010; 고가영·이근태, 2012; 김선빈 외, 2012; 반정호, 2012; 윤희숙, 2012), 자영업자의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에서 2~3위일 만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위기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자영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기(이병희, 2008; 금재호, 2011; 지은정, 2012)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쉽다. 더구나 향후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임금근로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영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빈곤은 현 시점의 복지욕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후 빈곤으로 연결되기 쉬워서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적 관심도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영업자의 빈곤이 실제 심각한 사회문제인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 역시 취업 취약계층으로 나타난다면, 빈곤정책의 대상을 자영업자에게 확대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는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진단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그동안 기술통계로 제시되었던 자영업자의 저숙련-고령화-빈곤, 서비스산업-고령화-빈곤의 연결고리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선행연구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른 소득격차 모델

대다수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 초기에도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소득증가율도 낮아서 사업을 시작한 후 10년 뒤에는 임금근로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35% 낮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은 이유를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기술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와의 소득격차는 Investment and agency model(Lazear and Moore, 1984), Matching and learning model(Roy, 1951; Jovanovic, 1982; Hamilton, 2000에서 재인용), 슈퍼스타 모델(Superstar model, Rosen, 1981)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Investment model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자신의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을 고용주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Agency model의 시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근무태만(shirking)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다(Lazear and Moore, 1984). 반면 Matching and learning model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관측되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부분특수 요인이 있고, 이로 인해 소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Roy, 1951; Jovanovic, 1982). 그 외 슈퍼스타 모델에 따르면, 자신이 떠오르는 스타(rising stars)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 돌아간다. 그 결과 자영업자는 매우 성공한 소수의 기업가와 대다수의 저소득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중위) 소득이 낮다(MacDonald, 1988; Hamilton, 2000에서 재인용).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및 산업구조의 변화

외국도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하였는데(Hamilton, 2000), 특히 최근에는 '신자영업자(new-employment)'의 증가로 자영업 비율이 더 높아졌다. 신자영업자는 전통적인 기업과는 달리, 직원 없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본수준이 낮다. 소득도 낮고 불규칙하여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과거와는 달리 노동유연화(flexibility of labor)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은 세계화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쟁격화, 상품수요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생산계약을 극복하며, 생산과 비용을 최적화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업들이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력을 분할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략을 취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하나로써 노동유연화 전략을 취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이

다. 비정규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 파견·용역, 임시(기간제) 고용도 해당되지만, 자영자 혹은 프리랜서 등과 같은 고용형태도 포함한다(권혁진 외, 2008). 외국도 건설 산업의 아웃소싱(outsourcing), 하도급계약(subcontracting),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사업체 등이 증가하면서 신자영업자도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자영업자는 저숙련 하청업체의 비율이 높다(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물론 노동유연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고용주가 비용을 줄이고자 수적인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기간제 계약, 임시근로 등)을 높인 결과로 보기도 하고(Muehlberger and Bertolini, 2007; 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에서 재인용), 생산시스템을 변화시켜 하도급, 외주화, 자영자 등의 외부화 형태를 띠는 질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전략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Goudswaard and Nanteuil, 2000; 권혁진 외, 2008에서 재인용).

둘째,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신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Lauzen-Ulbrich and Leicht, 2002). 서비스산업은 주로 진입장벽이 낮고(low entry barriers) 적은 자본금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서 자영업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 지위가 낮다(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3) 경기불황

많은 국가들이 197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1980년대 이후 저임금 노동 확산, 경기침체, 그리고 1990년대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체 창업을 돕는 자영업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졌다(반정호, 2012).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하고 만성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 실업자, 청년, 여성 등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자영자와는 다른 취약한 자영자 계층이 증가하였다(김경아·한정림, 2011).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 자영업 일자리 확장과 숙련수준의 평균화 정책은 평균 임금의 감소로 나타났고 저임금 노동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낳았다(Robson, 1997; Taiwo, 2011; 반정호, 2012에서 재인용). 또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저소득 비율이 높고, 빈곤율도 높아졌다(이병희, 2008).

특히,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2003년 신용대란 이후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은 매출과 소득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금재호, 2011). 더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상태에서(김복순, 2009), 내수침체가 지속되어 자영업 부문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병희, 2008). 영세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김복순, 2009) 뜻한다.

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유발 요인

자영업자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빈곤층이 되기 쉬운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 가구특성, 그리고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특성

(1) 저소득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은 가구특성이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 요인의 영향도 커졌다(이병희, 2008).

물론 저임금 근로가 근로빈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U 국가를 보면, 저임금근로자의 80%는 빈곤층이 아니다(HRSDC, 2006). 그러나 여전히 근로빈곤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이다(이병희, 2008; HRSDC, 2006; Crettaz and Bonoli, 2010; Eurofound, 2010).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으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빈곤 탈출과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으로 나타났다(이병희·이승렬, 2006; 이병희, 2008에서 재인용). 저소득자가 취업빈곤층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취업빈곤층 중 저소득 취업자의 비중이 78.3%에 이르러, 빈곤층에 속한 취업자는 대부분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이병희, 2008) 알 수 있다.

(2) 불안정한 고용형태

고용형태 또한 취업빈곤의 주요 예측요인이다(OECD, 2009; Eurofound, 2010).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득이 낮고 불규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취업빈곤층이 될 확률은 3~4배 더 높다(Bardone and Guio, 2005; Snel et al., 2008에서 재인용; HRSDC, 2006). 빈곤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가운데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말해준다(HRSDC, 2006).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길지만(Parker et al., 2005; HRSDC, 2006; Crettaz and Bonoli, 2010), 소득이 낮기(홍경준, 2005; 이동주 외, 2012; Hamilton, 2000)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임금근로자보다 빈곤위험이 더 높다(윤희숙, 2012). 빈곤율로 측정해도 자영업자의 절대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높고(반정호, 2012), 회귀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자영업자는 상용직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높거나(손병돈, 2010; 반정호, 2012), 빈곤이탈률이 상용직보다 낮다(홍경준, 2004; 이병희, 2007). 특히,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저소득 비율도 높지만 자영업자도 높고(이병희, 2008), 극빈층에 속할 승산(odds) 역시 자영업자가 임시·일용직보다 높다(손병돈, 2010). 이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의 경제

적 취약성이 최근에 발생한 일은 아니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의 소득이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낮았는데(반정호, 2011), 최근에도 자영업의 소득부진이 지속되는 것이다(최경수, 2010)¹⁾. 자영업이라는 고용특성이 근로빈곤층으로 연결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3) 자영업자의 고령화

일반적으로 노인은 빈곤율이 높고(홍경준, 2004; 2005), 빈곤탈출률이 낮다(이병희, 2007; 지은정, 2007).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30대(15.5%)가 가장 낮고, 그 이후 증가하여 50대는 34.3%, 60대 이상은 65.5%로 나타나 30대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이병희, 2008). 특히,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도 중고령층 및 고령층의 빈곤심화 양상이 나타나지만, 자영자 가구는 더 심하다(성지미, 2011). 더구나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이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나타나고(김기승, 2011),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도 늘고 있어(고가영·이근태, 2012) 자영업자의 고령화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 자영업은 마지막 의지처(last resort)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Congregado et al., 2010) 때문일 것이다.

실제 빈곤자영자 가구에서 45~64세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5.6%였다가 2010년 50.7%로 증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도 같은 기간 3.5%에서 22.1%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빈곤자영자의 72.8%가 45세 이상이다. 빈곤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45세 이상의 비율도 53.6%로 높지만, 빈곤자영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이 더 높다(반정호, 2012).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은 중고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반정호, 2011) 보인다.

(4) 자영업자의 저숙련화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빈곤률이 높거나(Lohmann, 2008; Snel et al., 2008), 빈곤탈출률이 낮는데(홍경준, 2004),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학력수준이 낮다. 저학력자는 임금근로 일자리 기회가 적어서 자영업에 더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복순, 2011). 임금근로 일자리는 승진과 소득증가 기회가 크기 때문에, 고학력자는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Georgellis et al., 2005). 자영업자가운데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비중이 72.9%로 상당히 높고(김복순, 2011), 저학력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낮은 것도(정영순, 2008) 이를 말해준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저숙련화와 빈곤에 대한 우려가 크다(김복순·반정호, 2011; 반정호, 2012).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임금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영업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김기승, 2011). 따라서 저학력 고령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교육, 연령집단이지만, 집단내 불평등이 더 큰 이유도 저학력이면서 고령인 자영업자의 결합효과(joint effect)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지은정, 2012).

1) 2003~2009년간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최경수, 2010).

(5) 자영업의 서비스산업화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부문과 영세사업체의 비중증가로 표현되는데, 서비스업이 단순히 제조업으로부터의 방출 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저수지 역할에 머물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전체의 구매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약하여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윤희숙, 2012). 자영업자가 근로빈곤층이 되는 이유 역시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1인당 부가가치(명목 GDP/취업자 수)가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되기(김복순·반정호, 2011; 고가영·이근태, 2012)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아서, 자영업자를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윤희숙, 2012).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한 채,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몰려 생계형 창업이 되기(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2010; 윤희숙, 2012)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베이비부머와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는데(한겨레, 2011. 11. 17; 고가영·이근태, 2012),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대부분 사업체 규모가 작은 운수업, 도소매업(금재호, 2009a) 등의 생계형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다(김복순, 2011; 이승렬, 2011). 반면, 청장년층의 자영업 비중은 크지 않지만(정재호, 2012) 청년층 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가영·이근태, 2012). 따라서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더라도, 중고령층은 근로생애기간동안 쌓아온 전문성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취업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 가구특성

가구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는 취업가구원의 소득, 부양자녀수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Strengmann-Kuhn, 2003; Peña-Casas and Latta, 2004; Andress and Lohmann, 2008;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8; Crettaz and Bonoli, 2010에서 재인용)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이 있으면 빈곤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 한 가구원의 소득이 낮아도, 빈곤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HRSDC, 2006; Lohmann, 2008; Crettaz and Bonoli, 2010; Eurofound, 2010).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이탈률이 높아지거나(홍경준, 2004; 이병희, 2007), 근로소득이 높은 결과도(반정호, 2012) 유사하다. 또한 부양자녀수도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다. 일을 해도 어린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Lohmann, 2008). 양부모가정(two-parents family)이라도 어린 자녀수가 많을수록 특히, 3~4명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부양자녀수가 많으면, 일을 해도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리고, 편부모의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HRSDC, 2006; Crettaz and Bonoli, 2010).

3) 구조적 특성: 과잉경쟁

최근 들어 경기불확실성의 증대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의 경쟁심화가 나타나고 과잉공급과 영업부진은 소득감소로 이어져, 결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나타났다(반정호, 2011; 김선빈 외, 2012). 이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경쟁강도는 일본 및 미국에 비해 크게 높다. 이·미용업의 경쟁강도는 미국의 8.3배이고 음식점업(7.0배), 부동산 중개업(5.6배), 숙박업(4.4배), 소매업(3.9배)도 경쟁강도가 높다(이병희·강기우, 2008). 더구나 노동공급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하반기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이로 인해 임금근로일자리가 부족해서 상당부분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고가영·이근태, 2012)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도 거주 지역의 사업체 비율이 높을수록 출혈경쟁으로 영업부진에 빠져 빈곤으로 영입되기 쉬울 것으로 예측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5차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소득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유사하여 소득하향신고 문제가 비교적 적어서 빈곤율 등 경제적 성과추정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분석에 적합하다. 자료는 가구소득을 구한 뒤(가구자료), 개인자료에 가구자료를 병합(merge)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되어,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가구가중치)를 부여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은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되, 시기적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5차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4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8~64세의 취업가구주이다. 근로빈곤층은 크게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 그리고 취업빈곤층의 3가지로 보는데(홍경준, 2005; Crettaz and Bonoli, 2010), 어떤 개념정의를 택하느냐 따라 분석결과 및 정책방향이 달라진다. 같은 근로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빈곤계층과 직업훈련이나 상담을 받는 계층, 노동시장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빈곤계층 등 다양하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하부집단에 따라 정책개입이 달라져야 하는데, 근로빈곤층을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면, 하부집단에 따른 문제 진단 및 정책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외국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보다는 경제활동빈곤층이나, 취업빈곤층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Crettaz and Bonoli, 2010).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빈곤층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취업빈곤층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어(이병희, 2007), 본 연구도 취업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근로는 910시간 이상 즉, 평균적으로 주당 35시간씩 26주 이상 일을 하거나(HRSDC, 2006),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의 유급으로 일하는 것을 뜻하므로(Crettaz and Bonoli, 2010),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 대신 소상공인이라고 지칭하지만(전인우 외, 2005²⁾), 일반적으로 통계청 및 EU(Eurofound, 2010) 기준에 따른 자영업자가 통용된다³⁾. 본 연구도 통계청의 정의를 따라 자영업자로 분류하였고, 자기보고방식에 따랐다. 취업빈곤층 실태의 최종분석대상은 취업 가구주로서, 1차는 3,728명이고, 2차는 3,410명, 3차는 3,166명, 4차는 3,011명, 5차는 2,955명이다. 이 가운데 자영업 가구주는 1차는 1,039명, 2차는 943명, 3차는 880명, 4차는 831명, 5차는 822명이다. 회귀분석은 4차와 5차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인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결측치는 제외하여, 표본선택의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있음을 밝힌다.

2) 분석방법

(1)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최근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지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곤율(Headcount Ratio)을 사용하였다. 빈곤율은 빈곤한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것(①)으로, i 번째 가구(y_i)의 소득이 빈곤선(z)보다 낮으면 $I(\cdot)$ 은 1이 된다(②, Houghton and Khandker, 2009).

$$P_o = \frac{N_p}{N} \dots\dots\dots ①, \quad P_o = \frac{1}{N} \sum_{i=1}^N I(y_i < z) \dots\dots\dots ②$$

P : 빈곤율, N_p : 빈곤 가구의 수, N : 전체 가구 수, y_i : i 의 소득을 지닌 가구, z : 빈곤선

여기서 빈곤기준을 절대빈곤(absolute term)을 사용할지, 삶의 수준 혹은 평균 시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대적 수준(relative term)을 사용할 것인지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Townsend, 1974; Sen, 1983; Atkinson, 1989; Leu et al., 1997; Glennerster et al., 2004; Crettaz and Bonoli, 2010에서 재인용; Houghton and Khandker, 2009). 빈곤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2)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전인우 외, 2005).

3) 자영업주는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된다.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주는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이승렬, 2009).

따라 빈곤의 규모는 물론 그 변화추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홍경준, 2005; OECD, 2009). 절대적 빈곤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를 기본적 욕구로 파악하고,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절대적 빈곤선은 한 시점에서 결정된 이후에는 물가변화만이 고려되며(홍경준, 2005),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최저생계비로 공표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국민의 복지 혹은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측정한다(여유진 외, 2005; OECD, 2009). 따라서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절대빈곤은 감소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감소하지 않는다(홍경준, 2005; OECD, 2009). 실제 부유한 국가일수록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과 상대빈곤선과는 차이가 크다(OECD, 2009).

본 연구는 절대빈곤으로 측정하였다. 상대빈곤이 절대빈곤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에 따른 빈곤을 측정하는데 더 적합하긴 하지만(Fremstad, 2008; OECD, 2009에서 재인용), 정책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절대적 빈곤선으로 측정하는 것이 탈빈곤정책과 관련된 논의에서 더 적절하다(홍경준, 2004). 선행연구의 빈곤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EU국가는 상대빈곤을 사용하고(OECD, 2009), 이현주 외(2006), 이병희(2007), Crettaz and Giuliano(2010: Crettaz et al., 2010에서 재인용) 등이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로 절대 빈곤율을 사용하고(HRSDC, 2006; OECD, 2009), 홍경준(2004), 반정호(2012)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모두 다 사용하였다.

(2) 회귀분석

①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논문의 연구가설 ①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빈곤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취업빈곤에 빠지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가설 ②와 연구가설 ③을 분석하고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표 1>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구분	연구가설	분석방법	대상(가구주)
연구가설 ①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율은 상용직에 비해 높을 것이다.	로지스틱분석	전체취업자
연구가설 ②	저학력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율이 대졸이상 청장년층에 비해 높을 것이다.	로지스틱분석 (상호작용항)	자영업자
연구가설 ③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율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에 비해 높을 것이다.	로지스틱분석 (상호작용항)	자영업자

② 변수 측정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취업빈곤여부이다.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는데도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이고,

근로빈곤가족(working poor family)은 가구원 가운데 근로빈곤층이 한명 이상 있는 가구를 뜻한다(HRSDC, 2006). 본 연구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일을 하면서 빈곤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취업빈곤으로 판단하였다.

빈곤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 150%, 200%를 사용하였다(5차, 2009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일 뿐, 이로써는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다. 더구나 국민소득은 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보장수준은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에서 2010년에는 30%로 낮아져(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캠페인 홈페이지),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빈곤계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EU나 OECD도 중위소득의 60%를 ‘빈곤위협선(at-risk-of-poverty-line)’으로 정의하여,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OECD, 2009; Crettaz and Bonoli, 2010). 또한 우리나라 저소득자는 취업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에 머물러 반복적인 빈곤을 상당수가 경험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6; 이병희·이승렬, 2006; 이병희,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빈곤위험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도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넓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전세대출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학금 지원, 고용노동부의 40~64세를 위한 ‘중장년층 새일 찾기 프로젝트’ 등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절대빈곤선의 20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OECD, 2009). 본 연구도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절대빈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연구모형 I·IV는 2009년 가구연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1, 넘으면 0으로, 연구모형 II·V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 1을, 연구모형 III·VI는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면 1로 입력하였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사용하였다. 가처분소득은 비교라는 차원에서 국제비교연구에 장점이 있고, 경상소득은 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대칭되어(김미곤·김태완, 2004; 여유진 외,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을 뜻한다. 근로소득 가운데 자영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이다(농림수축산업 순소득, 어업순소득 포함).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기타 재산소득의 합이며,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의 합이고, 사적이전소득은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보험 연금액, 기타 민간보조금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첫째,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인 상용직(기준변수)/임시·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인 고용주/자영자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 I~III에만 투입하였다. 둘째, 저소득 여부이다. 저소득은 중위소득의 2/3 이하를 뜻한다. 본 연구는 18~64세 근로연령계층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2008년 연소득). 중위 근로·사업소득(개인소득)의 2/3 이하이면 1, 중위소득의 2/3을 넘으면 0으로 입력하였다. 4차년도 중위소득(개인 근로·사업소득)의 2/3은 연 1,800만 원으로, 영세자영업자 정의와(월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 이승렬, 2009) 일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영업자의 저학력화는 교육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전

문)대졸 이상이다. 저학력자의 빈곤을 보기 위해 대졸이상을 기준변수로 삼았다. 넷째, 구조조정대상은 50대 뿐만 아니라 40대도 포함하여 진행되기 때문에(태원유 외, 2009), 40대는 생계대안으로 자영업에 진출해서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금재호, 2009b). 본 연구도 40~64세를 중고령자로 보았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저학력화-중고령화-빈곤고리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도 저학력자이면서 중고령 자영업자의 빈곤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중고령자와 저학력과의 상호작용항 ①을 투입하였다. 여섯째,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기준변수), 3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은 농·어·임업을, 2차 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3차 산업은 생산자·사회·유통·소비자서비스업을 뜻한다. 일곱 번째, 서비스산업이더라도 연령집단에 따라 빈곤위험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어 상호작용항 ②를 투입하였다.

〈표 2〉 변수 측정(범주)

변수		측정(범주)	
종속변수		취업빈곤=1, 비취업빈곤=0	
독립변수	고용형태	상용직(기준변수)/임시·일용직/고용주/자영자	
	저임금	개인 근로·사업소득 중위소득의 2/3이하 = 1, 초과=0	
	교육수준②	고졸이하=1/(전문)대졸 이상=0(기준변수)	
	중고령화④	40~64세=1/18~39세=0	
	상호작용효과①	자영업자의 중고령-저학력화 중고령×저학력(②×④)	
	산업	1차 산업	농업·임업·어업
		2차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기준변수)
3차 산업(서비스산업)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유통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상호작용효과②	서비스업의 중고령화 서비스산업×40대 이상(④×⑤)		
통제변수	구조적 요인	과잉경쟁(지역별 사업체 밀집도) (지역별 사업체수/전국사업체수)×100	
	가구특성	취업가구원수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인 가구원의 수(1~4명)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18세 미만 자녀의 수(가구원. 0~5명)
	개인특성	건강상태	(아주)나쁨/보통/(아주)좋음(기준변수)
		성별	남성=1, 여성=0(기준변수)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 가운데 구조적 요인인 과잉경쟁은 ‘지역별 사업체 밀집도’ 즉,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대비 지역별 사업체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자료는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소상공인지원센터, 2011)의 ‘지역별·기업규모별 사업체수’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사업체 비율로 구하였다. 지역은 한국복지패널의 조사에 따라 서울, 수도권(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도 7개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25.1%가 인천/경기도에, 22.4%가 서울에 밀집해 있었고, 강원/충북은 전체 사업체의 6.5%, 대전/충남은 6.7%만 분포되어 있다. 부산/경남/울산은

16.8%, 광주/전남/전북/제주도는 11.5%, 대구/경북 11.0%로 중간수준이다.

가구특성은 취업가구원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이다. 취업가구원은 주된 경제활동상태가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로 응답한 가구원을 모두 합하였다(고용형태 가운데 자활근로, 공공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부양자녀수는 18세 미만 자녀수의 합이다. 통제변수 가운데 개인특성은 건강상태((아주)나쁨/보통/(아주) 좋음), 성별(남자=1, 여자=0)이다. 근로시간도 주요 변인이지만, 자영업자는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한다고 응답하여 변량이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은 분석시작시점(1차, 2005년)과 회귀분석의 독립(통제)변수를 담고 있는 4차년도(2008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용형태를 보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임금근로 가구주 비율과(76.2%→76.0%), 자영업 가구주 비율은(23.8%→24.0%) 대동소이하다. 전체 자영업 가구주 가운데 고용주는 19.7%, 27.1%로, 고용주보다 자영자의 비율이 각각 4.1배(2005년), 2.7배(2008년) 높다. EU-15개국의 고용주 비율이 33.5%이고, 스페인은 34.7%(2008년)인 것과 비교해도 낮다. 외국도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이고, 일부만 직업을 창출하지만(Congregado et al., 2010),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 일자리 비율을 보면, 2005년에는 전체 취업 가구주의 16.4%가 일은 하지만 중위소득의 2/3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자이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09년에 18.9%로 더 높아진다.

고용형태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의 저임금비율은 4.4%이지만, 임시일용직은 10명 가운데 약 3명(28.4%명)이 저임금 근로자이다.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근로는 임시일용직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자가운데 저소득 비율은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다.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의 25.0%도 저소득자일 뿐 아니라, 자영자의 49.1%가 저소득자이다. 자영자 2명 가운데 1명은 저소득자인 셈이다. 저임금 노동은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지만, 자영업자도 저소득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난 이병희(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데 비해(28.4%→27.1%), 자영업자의 저소득 근로비율은 약 20%p 크게 증가한다(30.7%→49.1%). 또한 최근 고용주 가운데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4.6%에서 25.0%로 높아졌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현상이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수준을 보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 가운데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가운데 저학력자의 비율은 2005년 78.9%에서 76.1%로 감소하는 반면, 자영자는 75.5%에서 78.1%로 더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저학력화를 볼 수 있다. 독일 자영업자 가운데는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지만, 영국 자영업자는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유사하다. 중사산업은 3차 산업의 중사비율이 가장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표 3〉 분석대상자(18~64세 가구주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

특징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2005년	2008년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76.2%	76.0%	-	-	-	-	-	-	-	-
	상용직	49.1%	54.0%	-	-	-	-	-	-	-	-
	임시·일용직	27.1%	22.1%	-	-	-	-	-	-	-	-
	자영업자	23.8%	24.0%	-	-	-	-	-	-	-	-
	고용주 자영자	4.7% 19.1%	6.5% 17.5%	-	-	-	-	-	-	-	-
저소득 근로자	16.4%	18.9%	4.4%	5.1%	28.4%	27.1%	14.6%	25.0%	30.7%	49.1%	
교육수준	고졸이하	56.7%	55.1%	38.4%	39.8%	78.9%	76.1%	44.6%	49.3%	75.5%	78.1%
	(전문)대졸 이상	43.3%	44.9%	61.6%	60.2%	21.1%	23.9%	55.4%	50.7%	24.5%	21.9%
산업	1차 산업	4.0%	4.2%	0.2%	0.4%	1.9%	1.4%	-	2.6%	17.6%	20.0%
	2차 산업	38.0%	36.9%	43.6%	42.4%	43.3%	41.2%	43.2%	35.1%	15.0%	15.0%
	3차 산업	57.6%	58.9%	55.7%	57.1%	54.3%	56.5%	56.8%	62.2%	67.4%	65.0%
	결측치	0.4%	-	0.5%	-	0.5%	-	-	-	-	-
연령	18~39세	34.6%	29.8%	44.2%	38.4%	31.6%	26.7%	22.3%	21.3%	17.4%	10.3%
	40~64세	65.4%	70.2%	55.8%	61.6%	68.4%	73.3%	77.7%	78.7%	82.6%	89.7%
과잉경쟁	지역별	-	-	-	-	-	-	-	18.6%	-	16.6%
	사업체밀집도	-	-	-	-	-	-	-	-	-	-
취업 가구원수	1명	63.8%	53.1%	62.3%	52.7%	63.8%	52.1%	73.8%	68.3%	65.4%	50.1%
	2명	32.0%	40.1%	34.3%	41.4%	31.8%	39.4%	25.2%	28.4%	28.2%	41.5%
	3명 이상	4.1%	6.8%	3.4%	5.9%	4.4%	8.6%	0.9%	3.3%	6.4%	8.4%
부양 자녀수	0명	40.4%	44.8%	37.3%	37.8%	47.4%	56.8%	24.8%	37.1%	42.3%	54.1%
	1~2명	54.4%	50.0%	58.9%	56.6%	47.2%	38.4%	65.6%	55.2%	50.1%	42.1%
	3명 이상	5.2%	5.2%	3.8%	5.6%	5.4%	4.8%	9.6%	7.7%	7.6%	3.8%
성별	여	11.1%	10.7%	7.2%	93.0%	22.3%	77.8%	2.2%	96.5%	7.5%	89.9%
	남	88.9%	89.3%	92.8%	7.0%	77.7%	22.2%	97.8%	3.5%	92.5%	10.1%
건강상태	(아주)나쁨	8.8%	6.0%	4.6%	3.4%	14.0%	8.6%	4.8%	4.8%	13.3%	11.0%
	보통	12.6%	16.9%	10.1%	13.7%	15.9%	19.7%	10.0%	20.2%	14.7%	21.8%
	(아주) 좋음	78.6%	77.1%	85.3%	82.8%	70.1%	71.7%	85.1%	75.1%	71.9%	67.2%
사례수		3,728명	3,011명	1,535명	1,419명	1,154명	761명	145명	169명	894명	662명

주) 저소득: 중위소득의 2/3 이하. 1차는 연 1,392만원, 4차는 1,800만원임(18~64세의 근로연령계층의 개인소득). 각 년도 횡단면 가중치(모수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연령을 보면, 취업자가운데 40~64세 중고령자의 비중이 65.4~70.2%로 높다. 임시일용직 가운데 중고령층의 비율도 68.4~73.3%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중고령층 비율은 78.7%이고, 자영업자가운데 중고령층 비율은 82.6%로 높은데,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진다(2009년 약 90%). 자영업자의 중고령화를 볼 수 있다. 가구내 취업가구원수가 1명인 비율은 감소하고(63.8%→53.1%), 2명 이상인 비율이 높

아지고 있다. 취업가구원수가 2명 혹은 3명 이상인 비율은 자영자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수가 없는 비율은 44.8%, 2명 이상인 가구비율은 55.2%이다. 한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특히, 고용주 가운데 남성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는 자영자 가운데 건강상태가 (아주)나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2)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

근로연령계층인 취업가구의 빈곤율은 2005년 4.0%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비취업자의 빈곤율이 높은데(OECD, 2006), 본 연구는 18~64세 취업 가구주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최저생계비의 150%), 빈곤율은 13.6%로 근로연령계층인 가구주 취업자 100명 가운데 약 14명이 빈곤하고(2005년), 최저생계비의 200%로 측정하면 취업 빈곤율은 25.3%에 이르러 4명 가운데 1명은 빈곤상태이다. 과거 경제성장이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면서 마찰적 실업만이 빈곤의 원인이었던 것과는(윤희숙, 2012) 다르다. 취업빈곤율의 동태를 보면, 절대빈곤율은 4.0%에서 1.6%로, 차상위계층(200%)은 25.3%에서 15.3%로 낮아진다⁴⁾.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표본유실로 인해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 취업빈곤율을 보면, 자영업자의 절대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1~5차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05년은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율(7.4%)이 임금근로자의 빈곤율(2.9%)보다 2.6배 높았는데, 2006년부터는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3.5~3.7배 더 높아진다.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이고,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규모가 3.2배 더 크지만,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통상 창업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 등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지만, 최근의 창업은 오히려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이동주 외, 2012) 말해준다. 또한 과거에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자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계층에게 돌파구가 되어(김복순, 2009), 빈곤탈출의 대안이었던(성지미, 2011), 현재의 자영업은 임금근로의 대안도, 추가 소득의 대안도 아니며(European Commission, 2011), 빈곤의 해법도 아님을 말해준다. 자영업자의 소득 혹은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HRSDC(2006), Snel 외(2008), Eurofound(2010), Hamilton(2010)의 결과나, 캐나다와 유럽에서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3~4배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HRSDC, 2006; Eurofound, 2010).

더구나 임시일용직의 빈곤율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일반적으로 임시일용직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주된 정책대상이고 자영업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자영업자 특히 자영자의 취업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한편, 비임금 근로 중에서 비교적 직업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고용주의 절대빈곤율도 1.9%~6.6%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이 목도되던 2005년의 다음 해인 2006년과 세계경제위기였던 2008년에는 고용주의 빈

4) 복지패널 조사대상자의 빈곤율이 1~5차에 걸쳐 13.2%에서 7.4%로 낮아진 추세(남상호, 2012)와 일치한다.

곤율이 각각 6.6%, 5.4%에 이른다. 상용직과 비교하더라도 고용주의 빈곤율이 6~13.0배 높다. 고용주 역시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업성고가 낮은 고용주와 일하는 종업원(임금근로자)의 경제상황도 취약할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연도별·고용형태별 취업가구주의 빈곤율(절대빈곤율)

연도	빈곤 기준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주		
2005 년	80%	2.5%	1.5%	0.6%	3.2%	5.6%	1.9%	6.5%
	100%	4.0%	2.9%	1.0%	6.4%	7.4%	1.9%	8.8%
	120%	6.9%	5.6%	1.7%	12.6%	11.1%	4.0%	12.9%
	150%	13.6%	12.2%	4.3%	26.7%	17.9%	5.4%	21.1%
	200%	25.3%	24.0%	12.1%	45.7%	29.5%	10.2%	34.3%
2006 년	80%	1.8%	0.9%	0.2%	3.1%	4.9%	6.0%	4.5%
	100%	2.9%	1.8%	0.5%	6.4%	6.5%	6.6%	6.5%
	120%	5.1%	3.8%	1.2%	12.9%	9.6%	7.3%	10.4%
	150%	9.5%	7.8%	3.1%	24.7%	15.1%	10.2%	16.8%
	200%	20.7%	18.8%	11.3%	45.5%	26.8%	13.8%	31.5%
2007 년	80%	1.5%	0.8%	0.2%	3.0%	3.6%	1.9%	4.2%
	100%	1.9%	1.2%	0.3%	4.1%	4.4%	1.9%	5.3%
	120%	3.6%	2.2%	0.9%	7.1%	7.9%	2.4%	10.0%
	150%	7.8%	6.2%	2.3%	19.7%	12.9%	2.8%	16.7%
	200%	17.5%	15.8%	9.0%	39.6%	23.1%	6.3%	29.4%
2008 년	80%	1.0%	0.5%	0.3%	1.1%	2.5%	5.4%	1.4%
	100%	2.0%	1.2%	0.5%	3.1%	4.4%	5.4%	4.0%
	120%	3.5%	2.6%	1.0%	6.4%	6.3%	6.6%	6.2%
	150%	6.3%	5.4%	2.4%	13.0%	9.2%	6.8%	10.0%
	200%	15.5%	14.0%	7.3%	30.3%	20.4%	10.6%	24.0%
2009 년	80%	0.9%	0.5%	—	1.6%	2.2%	—	2.8%
	100%	1.6%	1.0%	0.1%	3.0%	3.5%	0.1%	4.5%
	120%	3.0%	2.1%	0.4%	6.0%	5.6%	1.4%	6.7%
	150%	6.0%	5.3%	1.2%	14.5%	8.0%	1.4%	9.9%
	200%	15.3%	14.3%	6.0%	33.0%	18.4%	4.4%	22.3%

주) 최저생계비의 80%, 100%, 120%, 150%, 200%임. 각 연도 횡단가중치(가구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또한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심각하다. 극빈곤층(최저생계비의 80%), 절대빈곤, 절대빈곤의 120%인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보면,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높다. 극빈곤층으로 측정하면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2.2~5.6%로, 임금근로자의 빈곤율(0.5%~1.5%)보다 3.7~5.4배 높다.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약 2.5배 더 높다. 임시일용직과 비교하더라도 자영업자의 빈곤정도가 더 심하다. 물론 절대빈곤율의 150%와 200%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각각 평균 1.7배, 1.3배 더 높지만, 극빈층으로 갈수록 극명하게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같은 취약 취업계층이더라도 자영업자의 빈곤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취업빈곤층(가구주) 구성(절대빈곤율)

연도	빈곤 기준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주		
2005년	80%	100%	47.0%	12.2%	34.8%	53.0%	3.5%	49.5%
	100%	100%	55.7%	12.1%	43.6%	44.3%	2.2%	42.1%
	120%	100%	61.6%	12.0%	49.6%	38.4%	2.8%	35.7%
	150%	100%	68.6%	15.5%	53.1%	31.4%	1.9%	29.5%
	200%	100%	72.3%	23.4%	48.8%	27.7%	1.9%	25.8%
2006년	80%	100%	36.9%	8.2%	28.7%	63.1%	20.3%	42.9%
	100%	100%	48.0%	11.2%	36.9%	52.0%	13.7%	38.2%
	120%	100%	56.1%	13.8%	42.3%	43.9%	8.8%	35.1%
	150%	100%	62.8%	19.2%	43.6%	37.2%	6.6%	30.6%
	200%	100%	69.6%	30.4%	32.5%	37.1%	4.1%	26.3%
2007년	80%	100%	42.4%	7.5%	34.9%	57.6%	8.3%	49.3%
	100%	100%	46.5%	10.5%	35.9%	53.5%	6.3%	47.3%
	120%	100%	47.5%	14.2%	33.4%	52.5%	4.4%	48.1%
	150%	100%	60.7%	17.6%	43.1%	39.3%	2.3%	37.0%
	200%	100%	68.8%	30.5%	38.3%	31.2%	2.3%	28.8%
2008년	80%	100%	40.1%	15.6%	24.4%	59.9%	34.9%	25.1%
	100%	100%	47.0%	12.4%	34.6%	53.0%	17.7%	35.3%
	120%	100%	56.4%	15.5%	40.9%	43.6%	12.4%	31.2%
	150%	100%	65.3%	20.3%	45.1%	34.7%	7.0%	27.7%
	200%	100%	68.5%	25.4%	43.1%	31.5%	4.4%	27.1%
2009년	80%	100%	42.2%	2.4%	39.9%	57.8%	—	57.8%
	100%	100%	47.5%	4.4%	43.1%	52.5%	0.5%	52.1%
	120%	100%	54.8%	7.1%	47.7%	45.2%	2.5%	42.8%
	150%	100%	67.7%	10.7%	57.0%	32.3%	1.2%	31.1%
	200%	100%	71.0%	20.4%	50.6%	29.0%	1.6%	27.4%

주) 연도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80%, 100%, 150%. 각 연도 횡단가중치(가구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셋째, 취업빈곤층의 구성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았다(〈표 5〉 참고).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은 취업빈곤층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5.7%로 자영업자보다(44.3%) 크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취업빈곤층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55.7%→47.5%)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3%에서 52.5%로 높아진다. 자영업 가구주가 취업가구주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한데, 취업빈곤층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 취업빈곤층의 주류가 자영업자로 재구조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내수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임금근로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취업빈곤의 자영업화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2005년에는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취업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3.6%, 42.1%로 비슷했지만, 2009년에는 임시일용직은 43.1%로 낮아지고,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52.1%로 높아진다. 취업빈곤의 절반이 자영업자인데, 특히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극빈곤층 가운데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은 더 높아지고(53.0%→57.8%) 임금근로자

의 비중은 낮아진다(47.0%→42.2%). 극빈층 가운데 자영업자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차상위계층의 구성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크다(2009년 최저생계비의 200% 기준 71%). 임시일용직 가운데 절대빈곤에는 속하지 않지만, 빈곤위험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중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72.3%→71%),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져서(27.7%→29.0%), 자영업자의 빈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전체 취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취업가구주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모든 연구모형에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가 상용직에 비해 취업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보다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빈곤위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구가설 ①을 지지한다. 본 연구대상인 자영업자는 모두 전일제로 일한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고용의 확대는 고용 불안정성, 소득의 비규칙성으로 인해 빈곤위험의 노출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Chen et al., 2005; 반정호, 2012에서 재인용). 선행연구 가운데 이병희(2007), 손병돈(2010), Biolcati-Rinaldi와 Podestà(2008), Lohmann(2008), Snel 외(2008) 등의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빈곤위험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저소득 가구주가 절대빈곤에 빠질 확률은 체계적이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에 빠질 위험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9.9%). 가구주가 저소득자이고, 가구소득도 낮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되지 못해서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이 근로빈곤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빈곤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전체 취업 가구주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로지스틱 분석)

변수			모형 I (최저생계비의 100%)				모형 II (최저생계비의 150%)				모형 III (최저생계비의 200%)			
			Coef	z	O.R.	P>z	Coef	z	O.R.	P>z	Coef	z	O.R.	P>z
독립 변수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1.33	2.71	3.77	.007*	1.63	5.99	5.08	.000***	1.35	8.74	3.86	.000***
		고용주	-.102	-0.09	.903	.925	-.340	-0.54	.712	.590	-.804	-2.32	.45	.021*
		자영자	1.19	2.20	3.30	.028*	.858	2.80	2.36	.005*	.595	3.28	1.81	.001**
	저소득		.598	1.76	1.79	.078	1.14	5.99	3.13	.000***	1.32	9.54	3.74	.000***
	학력	고졸이하	1.01	1.43	2.75	.151	1.11	2.36	3.03	.018*	1.46	5.11	4.29	.000***
	연령	40~64세	.275	0.30	1.32	.765	.713	1.18	2.04	.237	.923	2.54	2.52	.011*
	상호 작용①	고졸이하*												
		40~64세	-.853	-0.97	.426	.332	-.732	-1.34	.481	.179	-.663	-1.98	.515	.048*
	산업	농어업	1.79	3.47	5.96	.001	1.83	5.80	6.24	.000***	1.03	4.52	2.81	.000***
		서비스업	.062	0.10	1.06	.920	.373	0.88	1.45	.380	.290	1.09	1.34	.275
상호 작용②	서비스업*													
	40~64세	-.165	-0.23	.848	.821	.187	0.39	1.21	.694	-.130	-0.43	.878	.667	
통계 변수	취업가구원수		-.966	-2.89	.381	.004*	-.752	-4.28	.471	.000***	-.594	-5.52	.552	.000***
	부양자녀수		.295	2.01	1.34	.045*	.464	5.30	1.59	.000***	.755	11.63	2.13	.000***
	건강	보통	.191	0.54	1.21	.592	.234	1.12	1.26	.261	.227	1.53	1.26	.127
		(아주)나쁨	.225	0.50	1.25	.620	.481	1.85	1.62	.064	.278	1.35	1.32	.177
	성별		-.020	-0.05	.981	.963	-.249	-1.09	.779	.275	-.161	-0.90	.852	.369
상수		-.477	-4.98	-	.000***	-.467	-7.53	-	.000***	-.382	-9.90	-	.000***	
-2LL/chi-square			434.07/99.17(df=15)				1032.46/328.39(df=15)				1945.99/639.21(df=15)			
Prob > chi2			.000***				.000***				.000***			

*** : p값 <.001, ** : P값 <.01, * : p값 <.05

(2)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왜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 빠지는 것일까?

분석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에 빠질 위험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연구모형 IV).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150%, 200%로 분석하면(연구모형 V·VI),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먼저 저소득 자영업 가구주의 취업 빈곤율이 비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신뢰수준 99.9%). 자영업자의 영세화는 빈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전인우 외, 2005) 알 수 있다.5) 저임금 근로자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도 있다(HRSDC, 2006; Crettaz and Bonoli, 2010).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서,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저소득자인 자영업 가구주는 소득이 낮은 차상위 빈곤층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졸 이하 저학력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유의하게 높다(신뢰수준 95%). 고령 자영업자와 저학력 자영업자가 저소득 상황에 처할 위험

5) 본 연구 자료의 4차년도 근로자의 중위소득의 2/3이 월 평균 150만원으로, 영세자영업자 정의와(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이승렬, 2009) 일치한다.

이 높게 나타난 정영순(2008), 금재호(2011), 반정호(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7> 자영업 가구주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로지스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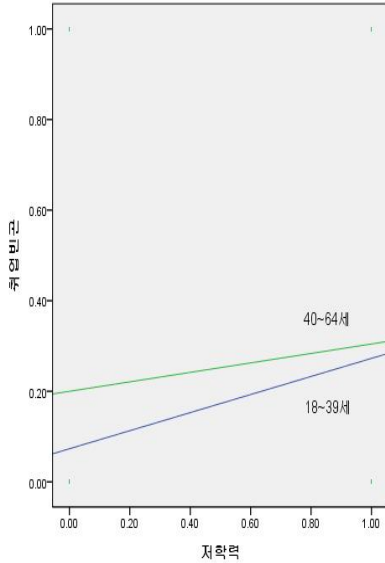
변수	모형 IV (최저생계비의 100%)				모형 V (최저생계비의 150%)				모형 VI (최저생계비의 200%)					
	Coef	z	O.R.	P>z	Coef	z	O.R.	P>z	Coef	z	O.R.	P>z		
독립 변수	저소득	.502	1.20	1.65	.232	.896	3.24	2.45	.001**	1.09	5.38	2.96	.000***	
	학력	고졸이하	.574	0.71	1.78	.478	.057	0.14	1.06	.887	.409	1.53	1.51	.125
	연령	40~64세	-1.49	-1.54	.23	.123	-.851	-1.21	.43	.225	-.549	-0.91	.577	.364
	상호 작용①	고졸이하* 40~64세	.728	1.61	2.07	.107	.935	2.97	2.55	.003*	.967	3.58	2.63	.000***
	산업	농어업	2.43	2.24	11.4	.025*	1.69	3.37	5.43	.001**	1.46	4.18	4.31	.000***
		서비스업	-615	-0.39	.54	.697	-1.44	-1.43	.24	.153	-.543	-0.81	.581	.418
	상호 작용②	서비스업* 40~64세	1.95	1.36	7.01	.175	2.07	2.03	7.93	.043*	1.38	1.96	3.99	.050*
과잉 경쟁	자영업 밀집도	-.063	-1.66	.94	.096	-.003	-0.14	.99	.890	-.011	-0.69	.990	.489	
통계 변수	취업가구원수	-708	-1.78	.49	.074	-.874	-3.36	.42	.001**	-.890	-4.81	.411	.000***	
	부양자녀수	.165	0.74	1.18	.457	.319	2.25	1.38	.024*	.592	5.51	1.81	.000***	
	건강	보통	.160	0.35	1.17	.729	-.001	-0.00	.99	.999	.094	0.40	1.10	.689
		(아주)나쁨	.138	0.24	1.15	.812	.407	1.10	1.50	.271	.203	0.65	1.23	.514
성별		.524	0.79	1.69	.432	-.224	-0.60	.80	.550	-.122	-0.40	.886	.689	
상수		-3.17	-1.75	-	.081	-1.73	-1.67	-	.094	-1.42	-1.79	-	.074	
-2LL/chi-square	215.56/47.08(13)				434.80/102.24(df=13)				694.50/156.23(df=13)					
Prob > chi2	.000***				.000***				.000***					

*** : p값 <0.001, ** : P값 <0.01, * : p값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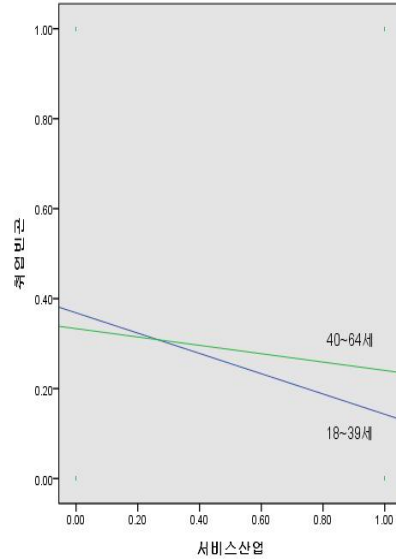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상호작용항 ①을 보면, 40~64세의 저학력 자영업자가 취업빈곤층이 될 확률이 대졸이상인 18~39세 청장년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신뢰수준 95%, <그림 1> 참고6). 교육수준이 근로빈곤의 결정요인(HRSDC, 2006; Biolcati-Rinaldi and Podestà, 2008; Snel et al., 2008)이지만, 특히 저학력 중고령자의 취업빈곤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의 소득 불평등 요인은 교육수준과 연령이지만, 저학력이면서 중고령층의 조합이 미치는 결합효과도 클 것이라는 예측(지은정, 2012)과 일치한다. 자영업자의 고령화-저숙련이 빈곤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해준다. 연구가설 ②를 지지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저학력 중고령 자영업자는 저소득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최근 불거진 '자영업 푸어'의 대부분은 고졸이하 40대 이상이

6) 30대와 40대 자영업자 가운데 각각 30.5%, 27.8%만 영세자영업자이지만, 50대와 60대 자영업자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비율은 41.2%, 61.1%(2008년 기준, 지은정, 2012)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1〉 저학력 - 중고령 자영업



〈그림 2〉 서비스산업 - 중고령 자영업

한편 〈그림 2〉를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가 취업빈곤에 속할 확률은 그 외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신뢰수준 95%). 연구가설 ③을 지지한다.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이 퇴직한 중고령자에게 일자리 대안이 될 수는 있더라도, 빈곤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임금근로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으면, 이미 포화상태인 서비스업에 더 많은 중고령 자영업자가 몰리면서 수익이 낮아지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 외에도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 빈곤율이 유의하게 낮아진다. 반면 18세 미만 부양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 빈곤율은 낮아진다(모두 유의수준 1%). 저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과 인적자본도 취업빈곤의 주요 요인이지만, 취업가구원수와 부양자녀수와 같은 가구특성도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취업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이 크다(OECD, 2009; Crettaz and Bonoli, 2010). 우리나라 역시 근로빈곤층 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이병희, 2007). 그러나 빈곤정책의 주된 대상은 비정규직에 맞추어져 있고, 자영업자는 정책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역시 취업 취약계층이다(윤희숙, 2012).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자영업은 실업문제 완화, 경제성장의 대안으로만 접근되고 있다(Pfeiffer and Reize, 2000; Reize, 2004; Congregado et al., 2010에서 재인용; 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European Commission, 2010; Taylor, 2011). 이로 인해 정책적으로 배려가 절실한 계층에게 공공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고(윤희숙, 2012), 자영업자는 일 년 내내 전일제로 일해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자영업자도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1~5차)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5배 높다(2005~2009년).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의 빈곤율도 높지만, 자영업자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빈곤정책의 대상임을 말해준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극빈곤층(최저생계비의 80%), 절대빈곤, 절대빈곤의 120%인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보면,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극명하게 높다.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더라도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용형태별 취업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 되는데,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여, 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이다(2007년과 2009년). 더구나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낮아지고, 취업빈곤층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취업빈곤층의 주류가 자영업자로 재구조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내수침체가 더 심각해지고,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취업빈곤층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나서 취업빈곤의 자영업화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보다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인 40~64세 자영업자가 취업빈곤층이 될 확률이 대졸이상인 18~39세 청장년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 자영업자의 중고령화-저숙련이 빈곤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가 취업빈곤에 속할 확률이 그 외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서비스산업의 중고령화가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창업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빈곤위험이 높은 계층이고, 임시일용직의 경제 상황보다 더 열악하므로, 자영업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을 견실하게 이끌 수 있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미국도 1980년대 소액창업체에게 창업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창업자금 지원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증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초기부터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창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Raheim and Aler, 1995; Clark and Kays, 1999; Klein et al., 2003; 정영순, 2008에서 재인용). 다른 OECD 국가도 자영업 육성정책을 실시하지만(European Commission, 2010; Taylor, 2011),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사업유지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Schulze Buschoff and Schmidt,

2009; European Commission, 2010; Taylor, 2011),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이행은 기업이 정신의 발현이나 소득극대화보다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는 많이 소멸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일자리들이 충분히 창출되기 못하고, 창출되더라도 고숙련·고학력·고기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아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재교육이나 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퇴출된 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나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이다(금재호, 2011). 따라서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년연장을 실시하며, 안정된 임금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중고령자들 특히, 저학력 중고령자가 자영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창업하더라도 생계형 자영업이 아닌 새로운 성장분야의 자영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연계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율과 빈곤율을 볼 때,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카드대란처럼 자영업자의 몰락이 나타나면, 자영업자의 경제상황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 재취업 훈련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수요측면에서 기업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낙인(성지미, 2011)을 갖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인식개선노력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는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경향도 있지만,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자영업 소득이 과대평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금재호, 2009b). 둘째, 한국복지패널의 패널유지율이 높지만, 유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참여나 빈곤율 추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권혁진·김성희·최은아, 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고가영·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ERI 리포트, 17-26.
- 김경아·한정림, 2011,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기승, 2011, “연령세대별 고용형태 변화연구”, 『경제연구』, 29(2): 95-110.
- 김복순, 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3월호: 12-24.
- _____, 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0월호: 7-18.
- 김선빈·김정근·손민중, 2012,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840호.
- 금재호, 2009a, “결론 및 정책과제”, 금재호 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 한국노동연구원, 315-338.
- _____, 2009b, “자영업주의 매출과 소득”, 금재호 편,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143-179.
- _____, 2011,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13(2): 131-168.
- 남상호, 2012, “소득빈곤의 동태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4월호(186호): 6-13.
- 반정호, 2011,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0월호: 19-32.
- _____, 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29-56.
- 성지미, 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간의 관계: 경력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소상공인지원센터, 2011, 『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소상공인진흥원.
- 손병돈, 2010, “빈곤심도별 빈곤결정요인 비교: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1): 3-28.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미디어리서치·리서치랩.
- 윤희숙,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제 14호.
- 이동주·표한형·홍상철·장윤섭, 2012,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 급증: 우려와 대책”,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 29호.
- 이병희, 2007,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13(2): 215-242.
- _____, 2008, “저소득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73호: 204-230.
- 이병희·강기우, 2008,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 _____, 2012,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8(1): 191-215.
- 이승렬, 2009,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자영업 노동시장연구(Ⅱ)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9-24.
- _____, 2011, “지난 10년간의 자영업을 되돌아본다”,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0월호: 1-3.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인우·유정식·최성호·이창민·윤성미, 2005,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정영순, 2008, “소액창업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복지정책』, 33(2): 531-557.
- 정재호, 2012,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1): 104-127.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_____, 2012,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55-83.
- 최경수, 2010, “저소득층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분석”, 『KDI 정책포럼』, 227호: 1-31.
- 태원유·류지성·손민중·조현국·김대정·김선빈·이연오, 2009, “실업위기의 뇌관, 중고령자 고용불안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1): 187-210.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Biolcati-Rinaldi, F. and Podestá, F., 2008, “Two countries in one: the working poor in Italy”, 203-226, in *The Working and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ited by Hans-Jürgen A. and Henning L., Cornwall: Edward Elgar Publishing.
- Congregado, E., Golpe, A. A. and Carmona, M., 2010, “Is it good policy to promote self-employment for job creation? Evidence from Spain”, *Journal of Policy Modeling*, 32: 828-842.
- Crettaz, E. and Bonoli, G., 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C-WP Working Paper, Reconciling Work and Welfare in Europe.
- Eurofound, 2010, “Self-employed workers: industrial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review: self-employment in Europe 2010”, ISSN 1725-5376, European Commission.
- Georgellis, Y., Sessions, J. G. and Tsitsianis, N., 2005, “Self-employment longitudinal dynam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Economic Issues*, 10(2): 51-84.
- Hamilton, B. H., 2000,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3): 604-631.
- Houghton, J. and Khandker, S. R., 2009, *Handbook of Poverty and Inequalit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HRSDC), 2006, “When working is not enough to Escape Poverty: An analysis of Canada’s working poor”, Working Paper,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Lazear, E. P and Moore, R. L., 1984, “Incentives, productivity and labor contra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2): 275-296.
- Lohmann, H., 2008, “The working poor in European welfare: empirical evidence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47-76, in *The Working and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ited by Hans-Jürgen A. and Henning L., Cornwall: Edward Elgar Publishing.
- OECD, 2006, *OECD Employment Outlook: Boosting Jobs and Incomes*, OECD, Paris.
-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Tackling the Jobs Crisis*, OECD, Paris.
- Parker, S. C, Belghitar, Y. and Barmby, T., 2005, “Wage uncertainty and the labour supply of self-employed workers”, *The Economic Journal*, 115(502): C190-C207.
- Schulze Buschoff, K. and Schmidt, C., 2009, “Adapting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to the needs of the ‘new self-employed’- Comparing the U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2): 147-159.

- Snel E., Boom, J. and Engbersen, G., 2008, "The silent transformation of the Dutch welfare state and the rise of in-work poverty", 203-226, in *The Working and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edited by Hans-Jürgen A. and Henning L., Cornwall: Edward Elgar Publishing.
- Taylor, M., 2011, "Self-employment flows and persistence: A European comparative analysis", ISER Working Paper,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www.iser.essex.ac.uk.
- 문화일보, 2012, "자영업자 폭발적 증가... '연쇄도산' 현실화되나", 2012년 8월 21일.
- 세계일보, 2012, "불황 직격탄...자영업 16% 폐업위기", 2012년 8월 4일.
- 연합뉴스, 2012, "가계문 열고 월 167만원 못 버는 자영업 수두룩", 2012년 8월 13일.
- 일자리와 실업, 2012, "하우스 푸어 보다 더 심각한 자영업 푸어 대란, 향후 30년 간다", 2012년 8월 21일.
- 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 "3중 위기에 몰린 자영업 푸어, 가계부채의 너판", 2012년 9월 2일.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캠페인. <http://cafe.naver.com/hopeup>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Ji, Eun Jeong

(Korean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Until recently, self-employment workers are often excluded from labor market studies. Most relevant studies ha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However, the self-employment is highly exposed to poverty risk although they are working. Despite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conomic severity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and the determinants of in-work poverty among th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people experience 3.5 times higher in-work poverty risk than employees. Especially, the ratio of own-account self-employed peopl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is similar with that of even precarious employees. Second, the extent of poverty of self-employment is more serious. Thir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among working poor is about 53% although self-employed workers are composed of only about 24% among working people. Fourth, temporary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full time employees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mplies that it is desirable to regard the self-employed as the policy target group along with temporary employees . Fifth, the ratio of in-work poverty of self-employed aged 40-64 whose education level is low and the self-employed aged 40-64 who work in low-skilled service sector ar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It implies that measures to alleviate their economic difficulties are urgently needed.

Key words: self-employed, in-work poverty, low-paid work, older workers, low-education, service industry

[논문 접수일 : 12. 11. 04, 심사일 : 12. 11. 08, 게재 확정일 : 13. 01. 25]